

2 0 2 1

[위피백과] 심 프\_ver.

수 국 월 장

수능 국어의 일취월장

W e P i



[26~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2021. 9월 [26~30]

국가, 지방 자치 단체와 같은 행정 주체가 행정 목적을 ㉠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 규제'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가 아니라,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나 지방 자치 단체와 같은 행정 기관이 제정한 법령인 행정입법에 의한 행정 규제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드론과 관련된 행정 규제 사항들처럼, 첨단 기술과 관련되거나, 상황 변화에 즉각 대처해야 하거나, 개별적 상황을 ㉡ 반영하여 규제를 달리해야 하는 행정 규제 사항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 기관은 국회에 비해 이러한 사항들을 다루기에 적합하다.

행정입법의 유형에는 위임명령, 행정규칙, 조례 등이 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행정 규제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때 특정한 내용에 관한 입법을 행정부에 위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제정된 행정입법을 위임명령이라고 한다. 위임명령은 제정 주체에 따라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으로 나누어진다. 이들은 모두 국민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입법예고,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위임명령은 입법부인 국회가 자신의 권한의 일부를 행정부에 맡겼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다. 그래서 특정한 행정 규제의 근거 법률이 위임명령으로 제정할 사항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 위임하는 포괄적 위임은 헌법상 삼권 분립 원칙에 저촉된다. 위임된 행정 규제 사항의 대강을 위임 근거 법률의 내용으로부터 ㉢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행정 규제 사항의 첨단 기술 관련성이 클수록 위임 근거 법률이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의 범위가 넓어진다. 한편, 위임명령이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범위를 벗어나서 제정되거나, 위임 근거 법률이 사용한 어구의 의미를 확대하거나 축소하여 제정되어서는 안 된다. ㉣ 위임명령이 이러한 제한을 위반하여 제정되면 효력이 없다.

행정규칙은 원래 행정부의 직제나 사무 처리 절차에 관한 행정입법으로서 고시(告示), 예규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일반 국민에게는 직접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법률로부터 위임받지 않아도 유효하게 제정될 수 있고 위임명령 제정 시와 동일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행정 규제 사항에 관하여 행정규칙이 제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위임된 사항이 첨단 기술과의 관련성이 매우 커서 위임명령으로는 ㉤ 대응하기 어려워 불가피한 경우, 위임 근거 법률이 행정입법의 제정 주체만 지정하고 행정입법의 유형을 지정하지 않았다면 위임된 사항이 고시나 예규로 제정될 수 있다. 이런 경우의 행정규칙은 위임명령과 달리, 입법예고, 공포 등을 거치지 않고 제정된다.

조례는 지방 의회가 제정하는 행정입법으로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제정되고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 적용된다. 제정 주체가 지방 자치 단체의 기관인 지방 의회라는 점에서 행정부에서 제정하는 위임명령, 행정규칙과 ㉥ 구별된다. 조례도 행정 규제 사항을 규정하려면 법률의 위임에 근거해야 한다. 또한 법률로부터 포괄적 위임을 받을 수 있지만 위임 근거 법률이 사용한 어구의 의미를 다르게 사용할 수 없다. 조례는 입법예고,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제정된다.

26. 밑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행정입법에 속하는 법령들은 제정 주체가 동일하다.
- ② 행정입법에 속하는 법령들은 모두 개별적 상황과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다.
- ③ 행정입법에 속하는 법령들은 모두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회의 위임에 근거한다.
- ④ 행정 규제 사항에 적용되는 행정입법은 모두 포괄적 위임이 금지되어 있다.
- ⑤ 행정부가 국회보다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행정 규제 사항은 행정입법의 대상으로 적합하다.

27.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그 위임명령이 법률의 근거 없이 행정 규제 사항을 규정했기 때문이다.
- ② 그 위임명령이 포괄적 위임을 받아 제정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③ 그 위임명령이 첨단 기술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④ 그 위임명령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권한을 행정 기관에 맡겼기 때문이다.
- ⑤ 그 위임명령이 구체적 상황의 특성을 반영한 융통성 있는 대응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28. 행정규칙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행정부의 직제나 사무 처리 절차를 규정하는 경우, 법률의 위임이 요구되지 않는다.
- ② 행정부의 직제나 사무 처리 절차를 규정하는 경우, 일반 국민에게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 ③ 행정 규제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위임명령의 제정 절차를 따르지 않는다.
- ④ 행정 규제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위임 근거 법률의 위임을 받은 제정 주체에 의해 제정된다.
- ⑤ 행정 규제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위임 근거 법률로부터 위임 받을 수 있는 사항의 범위가 위임명령과 같다.

29.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갑은 새로 개업한 자신의 가게 홍보를 위해 인근 자연 공원에 현수막을 설치하려고 한다. 현수막 설치에 관한 행정규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 시청에 문의하고 아래와 같은 회신을 받았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광고물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인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문의하신 규격의 현수막을 설치하려면 설치 전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또한 위 법률 제16조(광고물 실명제)에 의하면, 신고 번호, 표시 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 ○○시 지방 의회에서 제정한 법령에 따르셔야 합니다.

- ① ㉠의 제3조의 내용에서 ㉡의 제5조의 신고 대상 광고물에 관한 사항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겠군.
- ② ㉡의 제5조는 ㉠의 제16조로부터 제정할 사항의 범위가 정해져 위임을 받았겠군.
- ③ ㉡는 ㉢와 달리 입법예고와 공포 절차를 거쳤겠군.
- ④ ㉡에 나오는 '광고물'의 의미와 ㉢에 나오는 '광고물'의 의미는 일치하겠군.
- ⑤ ㉢를 준수해야 하는 국민 중에는 ㉡를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국민이 있겠군.

30.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나타내기
- ② ㉡: 드러내어
- ③ ㉢: 헤아릴
- ④ ㉣: 마주하기
- ⑤ ㉤: 달라진다

국가, 지방 자치 단체와 같은 행정 주체가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 규제'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가 아니라,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나 지방 자치 단체와 같은 행정 기관이 제정한 법령인 행정입법에 의한 행정 규제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드론과 관련된 행정 규제 사항들처럼, 첨단 기술과 관련되거나, 상황 변화에 즉각 대처해야 하거나, 개별적 상황을 반영하여 규제를 달리해야 하는 행정 규제 사항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 기관은 국회에 비해 이러한 사항들을 다루기에 적합하다.

1문단부터 쉽지 않습니다. 한 줄 안에 들어가 있는 정보량이 장난아닙니다. 6월 모의고사 ICT 지문에서도 그랬듯이, 정의를 곱게 제시하지 않습니다. 수식된 정의를 미친 듯이 활용하고 있어요. 천천히 한 번에 읽는 게 중요하겠습니. 이러한 방식으로 정보를 제시하는 지문은 11 수능의 채권지문이 있습니다. 수식된 정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한 문장 안에 다량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요. 자료에 같이 실어둘 테니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행정 규제에 대해 설명하고 이후 행정입법을 설명하는 동시에 바로 그걸 행정 규제와 연결 짓습니다. 그게 '행정입법에 의한 행정 규제'였죠. 그리고 이 녀석의 비중이 커진다고 하고, 그 배경을 설명해줍니다. 원래는 행정 규제랑 행정입법이 서로 구분되는 개념인데 이 두 녀석이 붙어버리는 '행정입법에 의한 행정 규제'가 늘어나고 그 배경까지 설명해 주니까 당연히 이 내용이 화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행정입법과 행정 규제의 개념을 잘 정리해두고 뒤에 화제가 이 내용을 바탕으로 어떻게 전개되는지 생각해봐야겠습니다.

그럼 한 문장씩 자세히 살펴봅시다.

국가, 지방 자치 단체와 같은 행정 주체가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 규제'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행정 규제의 정의와 더불어 그 조건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 같은 '행정 주체'가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행정 규제이고 이 행정 규제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행정 규제는 국민 권리 제한, 의무 부과를 하는, 말 그대로 '규제'입니다. 그리고 이 규제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야 한대요. 여기까지 정리하고 넘어가봅시다.

그러나 국회가 아니라,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나 지방 자치 단체와 같은 행정 기관이 제정한 법령인 행정입법에 의한 행정 규제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행정입법에 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행정입법은 '국회'가 아니라 '행정부나 지방 자치 단체'와 같은 '행정 기관'이 제정하는 것이네요. 원래 입법은 국회가 하는데 행정 기관이 하는 것이네요. 동시에 행정 규제와 행정입법 사이의 비교지점이 '주체'라는 점에서 잡힙니다. 그런데 그 중 지방 자치 단체는 겹치네요! 그럼 지방 자치단체는 행정입법도, 행정 규제도 모두 할 수 있는 대상이겠습니.

자 그런데, 행정입법을 그냥 던져주는 것을 넘어서 '행정입법에 의한 행정 규제'를 언급합니다. 하아.. 벌써 한숨이 나옵니다. 행정 규제랑 행정입법을 구분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이걸 붙여버리네요.

그래도 어찌겠어요. 정리해야죠. 다시 앞에서 나온 개념들을 떠올려봅시다. 행정 규제는 '행정 주체'의 소관이고, 권리 제한, 의무 부과와 같은 '규제'적인 성격을 띠는 개념이었습니다. 여기에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하기도 했어야 했죠. 반면 행정입법은 '행정 기관'이 제정한 것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면 '행정입법에 의한 행정 규제'는 뭘까요? 여기서 생각해볼 수 있는 건 행정 기관이 제정한 법령이 행정 규제처럼 규제의 성격을 띠는 것이겠네요. 여기까지 생각하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드론과 관련된 행정 규제 사항들처럼, 첨단 기술과 관련되거나, 상황 변화에 즉각 대처해야 하거나, 개별적 상황을 반영하여 규제를 달리해야 하는 행정 규제 사항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문장을 보고 화제를 잡을 수 있습니다. '행정입법에 의한 행정 규제'라는 개념이 왜 등장했는지 배경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관련된 추가 정보를 제시하고 있네요. 그럼 이 '행정입법에 의한 행정 규제'라는 친구가 중요하겠다는 느낌이 솔솔 옵니다. 화제가 될 것만 같아요! 그리고 이 내용이 뒤에서 등장하는 '행정입법에 의한 행정 규제'라는 화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같이 살펴봐야겠습니다. 간단히 읽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행정 기관은 국회에 비해 이러한 사항들을 다루기에 적합하다.

네 역시나 화제가 도입되는 배경입니다. 행정 규제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근거로 '국가, 지방 자치 단체'와 같은 행정 주체가 담당하는 것이었어요, 그럼 행정입법에 의해 행정 규제를 하는 이유는 당연히 행정입법의 제정 주체인 행정 기관이 원래 행정 규제의 근거인 법률을 만드는 국회보다 유리하니까 그런 걸 거예요.

다시 정리할게요. 지금 보면 '행정입법에 의한 행정 규제'가 왜 나왔는지, 그 도입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였나요? 그죠! 행정입법을 제정하는 행정 기관이 이

런 내용에 대한 법을 제정하기에는 국회보다 유리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정 기관이 제정하는 행정입법을 통해 행정 규제를 하는 겁니다.

행정입법의 유형에는 위임명령, 행정규칙, 조례 등이 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행정 규제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때 특정한 내용에 관한 입법을 행정부에 위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제정된 행정입법을 **위임명령**이라고 한다. 위임명령은 제정 주체에 따라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으로 나누어진다. 이들은 모두 국민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입법예고,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위임명령**은 입법부인 국회가 자신의 권한의 일부를 행정부에 맡겼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다. 그래서 특정한 행정 규제의 근거 법률이 위임명령으로 제정할 사항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 위임하는 **포괄적 위임**은 헌법상 삼권 분립 원칙에 저촉된다. 위임된 행정 규제 사항의 대상을 위임 근거 법률의 내용으로부터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행정 규제 사항의 첨단 기술 관련성이 클수록 위임 근거 법률이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의 범위가 넓어진다. 한편, 위임명령이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범위를 벗어나서 제정되거나, 위임 근거 법률이 사용한 어구의 의미를 확대하거나 축소하여 제정되어서는 안 된다. 위임명령이 이러한 제한을 위반하여 제정되면 효력이 없다.

문제의 2문단입니다.. 서술이 솔직히 과하긴해요. 리트넘새도 나고.. 이걸 완벽히 이해하려면 너무 힘듭니다. 굳이 그렇게 까지 할 필요도 없구요. 그래서 그냥 하던 대로 읽고 하던 대로 배워갑시다!

행정입법의 유형을 분류하고 있어요. 아까 1문단을 읽으면서 화제 잡았던 거 기억나시죠? 그럼 여기서 나오는 각각의 행정입법들이 어떻게 행정 규제와 연결되는지에 대한 내용도 등장하겠군요! 그럼 거기에 주목하면서 읽어야해요. 화제는 정보량 폭탄일 때 그 정보들에 휩쓸려 빠지지 않고, 내가 뭘 읽고 있는지 떠올릴 수 있는 구명조끼 같은 장치이니까요!

일단 행정입법의 종류 3가지를 제시하고 그중 위임명령이라는 친구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위임명령을 다시 제정 주체에 따라 3가지로 나누네요. 이후 위임명령이 절차를 거치고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포괄적 위임이라는 개념과 더불어 위임명령은 포괄적 위임이 안 된다고 하며 이 부분을 재진술로 나름 쉽게(?) 풀어 써줍니다. 그리고 이 위임명령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설명해주네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모~든 내용이 '행정입법에 의한 행정 규제'와 관련되어 있다는 생각과 함께 읽으셔야 합니다. 단순히 생각하면 그냥 위임명령에 대해 설명할 뿐이지만, 위임명령 자체가 행정 규제와 연결되어있어요! 이 포인트를 굉장히 미묘하게 숨겨놔서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이 문단이 그래도 대충이라도 무슨 소리를 하고싶은지 알 수 있어요. 그럼 한 문장씩 읽으면서 꼼꼼히 살펴봅시다.

행정입법의 유형에는 위임명령, 행정규칙, 조례 등이 있다.

네 행정입법의 유형을 3가지로 구분하고 있네요.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행정 규제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때 특정한 내용에 관한 입법을 행정부에 위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제정된 행정입법을 **위임명령**이라고 한다.

두 문장 한 번에 같이 볼게요. 위임명령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간단하게 먼저 봅시다. 위임명령은 국회로부터 위임 받아서 제정된 것이네요. 그런데 뭐가 위임되었나.., '행정 규제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때 '특정한 내용에 관한 입법'을 위임 받은 것이네요!

얼핏 보면

'엥 어쨌든 행정부가 제정한 거니까 그냥 행정입법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행정입법의 정의를 토대로 생각하고 정보를 처리한 것이니까요. 위임명령이 행정입법이기도 하구요. 실전에서는 사실 이해하려고 들지 않고 이렇게 처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분석하는 과정이니까 조금만 생각해봅시다. 일단 행정입법은 행정 기관이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위임명령은, 행정입법은 맞는데, '행정 규제 사항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특정한 내용'에 대한 입법을 위임받은 것이에요. 그냥 단순히 행정부가 입법하는게 아니라 '행정 규제 사항'에 대해서! '국회의 위임'을 받아서! 누가? '행정 기관'이! 입법하는 겁니다. 행정입법에 의한 행정 규제를 한다는 소립니다. 네. 화제네요.

조금 더 가서 화제의 도입 배경도 하나 생각해봅시다. 행정입법의 주체인 '행정 기관'이 누구보다 유리했기 때문에 화제가 등장한 거죠? 네. '국회'보다 유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임명령은 행정 규제의 내용을 담은 행정입법인거고, 그 과정에서 국회로부터 위임을 받는 것까지 당연하게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모든 내용의 맥락이 화제의 내용으로 수렴했네요.

위임명령은 제정 주체에 따라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으로 나누어진다.

위임명령을 제정 '주체'에 대해서 또 나누고 있습니다. 주체라는 키워드(비교지점이었죠?)가 은근히 자주 나오네요. 앞에서 잡아두었다면 더 수월하게 읽었을 것 같습니다.

이들은 모두 국민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입법예고,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런 위임명령들은 전부 국민에게 적용된대요. 그래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일단 위임명령이 행정 규제 사항에 대한 특정한 내용을 국회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제정된 법률이었죠? 그러니까 행정 규제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고 아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행정 규제는 뭐였나요? ‘국민’에 대한 규제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모두 국민에게 적용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가 필요한 것이구요. 이 정도로 파악하고 넘기면 충분하겠습니다.

위임명령은 입법부인 국회가 자신의 권한의 일부를 행정부에 맡겼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다.

그냥 넘기셔도 되지만 생각할 지점이 분명히 있는 문장입니다. 위임명령은 국회의 위임 + 행정 규제 내용을 담은 행정입법이었습니다.

이게 왜 국회가 권한을 넘겼기 때문에 정당화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볼게요. 일단 행정입법의 정의를 떠올려보면 그냥 행정 기관이 제정한 법령이었습니다. 반면 행정 규제는 행정 주체가 담당하는 것이었죠? 거기에 국회가 만든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문단 읽으면서 국회가 행정 주체와 같은 범주에 속한다는 것까지 파악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행정 규제에 대한 내용은 행정 주체가 다루는 부분이고 그에 대한 내용을 제정하는 건 국회입니다. 행정 규제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고 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행정입법에서 다룰 순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 규제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위임명령이 인정되는 건 원래 담당인 국회로부터 위임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네.. 좀 어렵긴합니다. 실전에서는 파악하기 어려운 게 맞아요. 실전에서는 그냥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와 같은 맥락으로 파악하고 넘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행정 규제의 근거 법률이 위임명령으로 제정할 사항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 위임하는 포괄적 위임은 헌법상 삼권 분립 원칙에 저촉된다.

이것부터 슬슬 뇌절오긴 해요. 특히 저 삼권분립... 그냥 넘겨도 되는데 생각하면서 읽으려고 물고 늘어지면... 어휴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실전에서는 그냥 ‘포괄적 위임은 위임명령에서 인정 안 된다’라고만 생각하고 넘기셔도 충분합니다.

그래도 하나씩 생각해봐야겠죠? 자 위임명령은 국회로부터 행정 규제 사항의 ‘특정한’ 내용에 대한 입법을 위임받아서 만들어진 ‘행정입법’입니다. 그런데 포괄적 위임의 정의를 보니까 제정 사항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네요. 다시 말하면 ‘특정한 내용’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럼 위임명령의 정의 자체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정되지 않겠죠?

자 그럼 저 삼권 분립 원칙이라는 친구를 해결해야 합니다. 앞에서 이해한 흐름이랑 비슷해요. 기본적으로 행정 규제에 대한 입법은 국회가 담당하는 거죠(이 부분은 국회가 입법부라는 사실을 알고 받아들이면 훨씬 편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회가 담당하는 행정 규제에 대한 내용을 범위를 정하지 않고 행정입법으로 처리하면 그냥 행정 기관이 행정 규제에 대한 법률을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국회의 권한을 침범한 것이겠죠? 그래서 삼권 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는 거네요. 행정 기관은 행정부이고 행정 규제는 행정 주체가 실시하며, 그 근거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있었으니까요.

위임된 행정 규제 사항의 대강을 위임 근거 법률의 내용으로부터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포괄적 위임이 안되는 이유를 재진술로 풀어써줍니다. 아까 살펴보았듯이, 위임명령은 국회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서 정당화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위임은 행정 규제 사항 제정에 있어서 ‘특정한 내용’에 대한 부분이었죠. 그래서 포괄적 위임은 범위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행정 규제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위임 근거 법률의 내용이 있을 것이고, 포괄적 위임은 그 근거 법률에서 ‘특정한 내용’의 범위를 안 정했으니까 뭘 위임한 건지 근거 법률을 바탕으로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포괄적 위임은 예측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원래는 예측 가능해야 하는 건데 포괄적 위임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정 못 한다는 겁니다.

다만 행정 규제 사항의 첨단 기술 관련성이 클수록 위임 근거 법률이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의 범위가 넓어진다.

첨단 기술 관련성이 클수록 위임 범위가 넓어진대요. 그냥 읽으면 갑작스럽게 튀어나온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미 화제를 잡으면서 화제의 도입 배경에 대해서도 파악했습니다. 첨단 기술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기에는 국회보다 행정 기관이 더 유리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관련성이 클수록 행정 기관에 위임하는 범위가 넓어지겠죠? 행정 기관이 그 문제를 다루기에 더 유리하니까요!

한편, 위임명령이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범위를 벗어나서 제정되거나, 위임 근거 법률이 사용한 어구의 의미를 확대하거나 축소하여 제정되어서는 안 된다.

앞 문장 해설하면서 말했듯이, 위임받을 땐 그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범위를 넘어서는 건 안 되는 것이죠. 어구의 의미를 확대/축소하는 것도 결국 비슷한 말이겠죠? 위임한 한도를 넘어서는 것이니까요.

위임명령이 이러한 제한을 위반하여 제정되면 효력이 없다.

네 제한을 위반하면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효력은 당연히 행정 규제에 대한 효력이겠죠? 그러니까 그 위임 범위를 넘어서면 위임명령이 행정 규제에 대한 효력을 갖지 못한다는 말이네요. 자, 여기서 행정 규제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는 뜻이겠죠? 그럼 범위를 벗어난 제정과 의미 확대/축소는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이게 곧 27번 문제의 풀이이기도 합니다.

행정규칙은 원래 행정부의 직제나 사무 처리 절차에 관한 행정입법으로서 고시(告示), 예규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일반 국민에게는 직접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법률로부터 위임받지 않아도 유효하게 제정될 수 있고 위임명령 제정 시와 동일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행정 규제 사항에 관하여 행정규칙이 제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위임된 사항이 첨단 기술과의 관련성이 매우 커서 위임명령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워 불가피한 경우, 위임 근거 법률이 행정입법의 제정 주체만 지정하고 행정입법의 유형을 지정하지 않았다면 위임된 사항이 고시나 예규로 제정될 수 있다.> 이런 경우의 행정규칙은 위임명령과 달리, 입법예고, 공포 등을 거치지 않고 제정된다.

행정입법 중 두 번째인 행정규칙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행정규칙은 그냥 행정부 직제나 사무 처리 절차같은 것만 규정하지 행정 규제의 내용은 포함하지 않는 게 기본이네요. 그런데, '예외'적인 경우로 행정 규제의 내용을 다루기도 합니다. 예외의 포인트가 화제와 연결되네요. 역시나 주목 해주어야 할 포인트 중 하나에서 중요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앞에서 제시된 개념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위임명령과는 어떤 점이 같고 어떤 점이 다른지에 대한 비교지점도 같이 주목하면서 읽어봅시다.

행정규칙은 원래 행정부의 직제나 사무 처리 절차에 관한 행정입법으로서 고시(告示), 예규 등이 여기에 속한다.

행정규칙에 대한 정의를 말해주네요. 행정규칙은 행정부의 직제나 사무 처리 절차같은 것일 뿐이고 고시나 예규 등이 있답니다. 그냥 읽고 넘겨주시면 돼요. 단, 행정규칙도 행정입법이라는 점을 상기하고 역시나 행정 기관이 제정한 법령이라는 것은 끌고 와줘야겠죠?

일반 국민에게는 직접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법률로부터 위임받지 않아도 유효하게 제정될 수 있고 위임명령 제정 시와 동일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법률 위임 여부와 절차 유무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동시에 이 부분이 위임명령과의 비교지점으로 작용하기도 하죠. 행정규칙은 일반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법률 위임이 필요가 없을뿐더러 절차도 필요 없다고 해요.

위임명령은 절차가 필요했죠? 왜 필요했나요? 국민에게 적용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국민에게 적용되는 이유는 행정 규제에 대한 내용을 다루기 때문이었죠. 행정 규제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행정규칙은 행정 규제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할 필요도 없고 위임명령처럼 국회의 위임을 통해 정당화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위임이 없어도 유효하고, 절차도 거치지 않는 것이네요. 위임 여부와 절차에 대해서 위임명령과의 비교지점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그 지점들에 대해서 발생하는 차이는 행정 규제에 대한 내용의 유무에서 기인했네요!

그러나 행정 규제 사항에 관하여 행정규칙이 제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네 아까 행정규칙은 행정 규제를 다루지 않았는데 예외로 행정 규제 사항에 대해 행정규칙이 제정될 수 있다고 하네요. 화제 기억나시죠? 자연스럽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앞에서 파악한 비교지점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행정 규제에 대한 내용의 유무였는데 예외적으로 행정 규제를 다룬다면, 앞에서 잡은 비교지점에 대해서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해봅시다.

<위임된 사항이 첨단 기술과의 관련성이 매우 커서 위임명령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워 불가피한 경우, 위임 근거 법률이 행정입법의 제정 주체만 지정하고 행정입법의 유형을 지정하지 않았다면 위임된 사항이 고시나 예규로 제정될 수 있다.>

지금 행정규칙(행정입법)에 의한 행정 규제에 대한 내용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규칙의 예외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보니까 첨단 기술과의 관련성이 문제가 되네요. 결국 행정입법에 의한 행정 규제의 도입 배경과 같은 맥락입니다. 화제의 중요성 다시 한 번 되새깁시다 ㅎㅎ

그런데 그냥 관련성이 문제가 아니고, 그 관련성이 '매우 커서' '위임명령으로 대응'이 어려울 때 발생합니다. 일단 위임명령도 결국 행정입법에 의한 행정규제 중 하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첨단 기술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기에는 국회보다 유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임명령마저 대응이 어려울 때 행정규칙이 행정 규제에 대한 내용을 다룰 수 있대요.

그럼 여기서 하나 생각해볼 지점은,

**'왜 위임명령보다 행정규칙이 관련성이 매우 클 때 대응할 수 있는 것인가?'**

입니다. 하나씩 따져 봅시다. 위임명령은 위임 범위가 정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범위와 관련해서 첨단 기술과의 관련성이 클수록 범위가 넓다고 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위임명령은 범위가 정해져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관련성이 매우 크다면? 범위도 매우 넓어지겠죠? 그럼 위임 명령이 안 통하는 것이네요. 직관적으로 이해해 보자면 관련성이 너무 커서 범위가 너무 넓어져서 없는 것처럼 되버리는 거죠. 마치 수학에서 무한대로 발산하듯이요. 그럼 범위가 사실상 없는 것이니까 위임명령으로 대응하지 못하게 되겠죠?

지문 내용을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이해해 보자면, 마찬가지로 관련성이 매우 크면 범위가 매우 넓어질테고 그럼 위임받은 행정 규제의 내용을 근거 법률로부터 예측할 수가 없을 것이니까 효력이 없어지겠네요? 위임명령은 근거 법률로부터 위임 내용을 예측할 수 있어야 했는데, 범위가 너무 넓어지면 예측이 안되겠죠? 그러면 대응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맞습니다. 이렇게 추론해도 됩니다.

그럼 이 예외상황이 일어나는 조건은 간단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범위에 대해서 행정규칙이 위임명령보다 대응하기가 수월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제정 주체만 지정한 경우에 가능하구나~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충분해요.

이런 경우의 행정규칙은 위임명령과 달리, 입법예고, 공포 등을 거치지 않고 제정된다.

예외의 경우에서도 비교지점이 잡히네요. 위임명령은 절차가 필요하고 행정규칙은 필요없다! 간단합니다.

대신 이걸 생각해볼만 해요. 아까 행정 규제에 대한 사항을 다루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절차 필요의 유무가 나뉜다고 했는데, 행정규칙으로 행정 규제에 대한 내용을 다룰 때는 절차가 필요 없어요. 이걸 그냥 예외로 처리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원래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 규제를 다룰 때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애는 기본적으로 행정규칙이기도 하고 예외이기도 하기 때문에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는 느낌으로요. 아니면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것 자체를 예외로 봐도 좋겠습니다.

조례는 지방 의회가 제정하는 행정입법으로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제정되고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 적용된다. 제정 주체가 지방 자치 단체의 기관인 지방 의회라는 점에서 행정부에서 제정하는 위임명령, 행정규칙과 구별된다. 조례도 행정 규제 사항을 규정하려면 법률의 위임에 근거해야 한다. 또한 법률로부터 포괄적 위임을 받을 수 있지만 위임 근거 법률이 사용한 어구의 의미를 다르게 사용할 수 없다. 조례는 입법예고,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제정된다.

행정입법 중 마지막인 조례입니다. 애도 역시나 행정입법이라는 큰 틀 안에서 나머지 위임명령·행정규칙과 비교지점이 잡히고, '행정입법에 의한 행정 규제'라는 화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모든 문단을 통틀어서 그나마 쉬운 문단이네요... 마저 읽으러 가봅시다.

조례는 지방 의회가 제정하는 행정입법으로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제정되고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 적용된다.

조례의 정의를 제시합니다. 역시나 행정입법이라는 점을 상기시켜주는데, 제정 주체가 지방 의회입니다. 아까 행정입법을 제정하는 주체를 1문단에서 행정부나 지방 자치 단체와 같은 '행정 기관'이라고 봤죠? 까먹었더라도 이 문장을 보고 기억해줍니다. 그리고 지방 의회가 제정하니까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할 것이고 지역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해 적용하겠네요. 간단합니다.

그런데 그냥 넘기기 아깝죠? ㅋㅋ 머리를 더 괴롭혀봅시다. 지방 자치 단체 즉, 지방 의회는 행정 규제를 행하는 행정 주체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조례가 행정 규제에 대한 사항을 다룬다면,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지방 의회가 적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제정 주체가 지방 자치 단체의 기관인 지방 의회라는 점에서 행정부에서 제정하는 위임명령, 행정규칙과 구별된다.

웬일로 친절하게 비교지점을 알아서 떠먹여 주네요.. 잘 받아먹읍시다.

조례도 행정 규제 사항을 규정하려면 법률의 위임에 근거해야 한다.

네 당연하죠? 행정 규제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고 했어요. 같은 맥락으로 처리해줍니다.

또한 법률로부터 포괄적 위임을 받을 수 있지만 위임 근거 법률이 사용한 어구의 의미를 다르게 사용할 수 없다.

포괄적 위임 가능 여부에 대해서 위임명령과 비교지점이 잡힙니다. 위임명령은 안 됐었죠? 반면 확대/축소 해석 여부에 대해서는 똑같이 불가능하네요. 차이점과 공통점이 동시에 제시되었습니다.

조례는 입법예고,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제정된다.

네 역시나 행정 규제에 대한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절차를 거쳐 제정된다고 해요.

전체적으로 구조 자체는 간단했습니다. 그런데 서술 방식이 장난 아니었죠. 수식된 정의로 미친 듯이 쏟아내는 것도 그렇고, 앞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뒤에 내용을 절대 이해할 수 없도록 만들어놨어요. 특히 2문단이 정말 과합니다. 수능 때는 이정도로 나오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런 불친절한 서술을 강조하긴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9월 모의고사에서 얻어갈 점들을 정리하면서 언급해 둘 테니 참고해주시길 바랄게요.

앞의 내용을 끌고 내려와야 한다는 점과 계속 개념의 정의를 떠올리면서 지문을 읽어야 한다는 점에서 11수능 채권, 13수능 음성인식기술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일단 수능에서 이런 서술 방식으로 출제한다면 이 지문의 수준보다는 위에서 말한 기출 난이도 내외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급한 기출 지문들을 같이 수록할 테니 꼭 지문 분석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26. ⑤

네. 행정입법에 의한 행정 규제의 도입배경이었죠? 문제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① 행정입법 중 하나인 조례는 달랐습니다. 또 위임명령 내에서도 제정 주체에 따라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으로 나뉘기도 했지요.

② 지방 의회가 제정하는 조례에만 해당하는 특징입니다.

③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국회의 위임이 필요 없었죠? 행정부의 직제나 사무 처리 절차같은 것들이 행정규칙이었고 애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절차도 필요 없었습니다. 다만, 행정규칙으로 행정 규제를 하는 '예외'가 있었을 뿐입니다.

④ 조례와 위임명령의 비교지점을 물어보네요. 위임명령은 포괄적 위임이 금지되었지만, 조례는 가능했습니다.

27. ①

위임명령에 의한 행정 규제를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지문 해설하면서 이야기했죠? 간단하게 다시 설명하자면 행정 규제는 원래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야 했었고 그 근거 법률로부터 규제 내용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그 규제 효력이 없다는 것은 곧 법률의 근거가 없다는 뜻이겠죠.

② 범위를 넘어서 제정한다는 게 문제였는데 포괄적 위임은 범위를 지정하지 않고 위임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맥락의 내용입니다.

③~⑤ 틀린 이유를 모르겠다면 지문을 다시 읽어봅시다.

28. ⑤

행정규칙의 예외적 경우에 대해 물어보는 선지입니다. 일단, 행정규칙이 행정 규제 사항을 다루는 예외적 경우는 위임명령으로 대처하기가 어려울 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위에서 설명했죠?

그래도 일단 하나씩 다시 따져봅시다. 행정입법에 의한 행정 규제의 도입 배경 자체 중 하나가 첨단 기술과의 관련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관련성이 클수록 위임 범위가 넓어지구요.

위임명령은 이러한 화제의 내용과 관련된 개념으로, 범위를 지정한 후에 위임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행정규칙이 행정 규제 사항을 다루는 예외사항은, 첨단 기술과의 관련성이 너무 커서 범위를 지정한 위임명령으로 대처하기가 어려울 때였으니, 당연히 둘의 범위는 다를 겁니다.

예외 상황 자체가 첨단 기술과의 관련성이 클수록 위임 범위가 넓어지는데, 위임 범위를 정하는 위임명령으로 대처하기 어려울 때니까요!

① 네 행정규칙의 정의를 그대로 물어봅니다. 행정부의 직제나 사무 처리 절차를 규정하는데 이때는 일반 국민에게 직접 적용되지 않고 행정 규제의 내용을 담는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법률의 위임이 필요없어요.

② ①번 선지와 같은 맥락이죠?

③ 마찬가지로 적용 대상이 일반 국민이 아니었기 때문에 절차도 필요없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냥 일대일 대응 식으로 풀어도 무방합니다만, 그래도 글을 읽은 것을 바탕으로 선지를 지워보는게 좋겠죠?

④ 행정규칙의 예외에 대한 내용을 물어봅니다. 이때는 위임 근거 법률이 제정 주체만 지정하고 유형은 지정하지 않은 경우이니까, 당연히 지정된 제정 주체에 의해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29. ④

- <보기> 먼저 보고 갑시다. 갑은 가게 홍보를 위해 현수막을 설치하려고 현수막 설치에 관한 행정 규제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럼 아래의 법률은 모두 현수막 설치에 대한 내용이겠죠? 그런데 보니까 전부 '광고물'이라는 표현으로 법률들이 제시되네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광고물은 <보기>에서는 가게 홍보를 위한 현수막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하나씩 볼게요.

우선 ㉞는 그냥 법률입니다. 아마 국회가 제정한 것이겠죠? 행정 규제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㉜는 대통령령이니까 행정입법 중 위임명령이네요. 그리고 ㉟ 중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광고물에 관한 사항'을 ㉜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광고물에 관한 사항'이라는 행정 규제의 특정한 내용을 ㉜라는 법률의 위임에 따라 행정입법으로 다루는 것이죠?

㉞는 지방 의회에서 제정했다고 하니 조례이군요. 거기에 위 법률의 16조라고 했으니까 ㉟의 16조에서 규정 사항이 있는데 이는 조례인 ㉞에 따라야 한다고 해요.

살펴보니까 ㉜와 ㉞는 일단 ㉟(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해 위임을 받아서 행정 규제를 다루는 거네요. 이제 선지를 하나씩 보러 갑시다.

정답 먼저 볼게요.

㉔ 둘 다 현수막 설치에 대한 행정 규제를 다루고 있으니  
여기서 말하는 옥외 광고물은 당연히 현수막이겠죠? 허무하  
게 쉽네요.

① ㉔와 ㉕가 바뀌었습니다. ㉔에서 다루는 내용을 ㉕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죠. 그게 뭐였나요? 허가,  
신고 광고물에 관한 사항이었습니다.

② ㉔의 16조가 아니고 3조이겠죠..? 위임명령의 근거 법률  
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인데, ㉕는 지방 의회가 제정한 행정  
입법이니깐요.

③ ㉕와 ㉔, 위임명령과 조례 둘 다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⑤ ㉕가 지역에서 발생한 사안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즉,  
그 지역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반면 ㉔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 규제의 내용을 다루니  
다. 따라서 반대가 되어야겠죠.



# 유사 기출 다시 보기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2013. 수능 [43~45]

음성 인식 기술은 컴퓨터가 사람이 말하는 소리를 인식하여 해당 문자열로 바꾸는 기술이다. 사람의 말은 음소들의 시간적 배열로 볼 수 있다. 컴퓨터는 각 단어의 음소들의 배열을 '기준 패턴'으로 미리 저장해 두고, 이를 입력된 음성에서 추출한 '입력 패턴'과 비교하여 단어를 인식한다.

음성을 인식하기 위해서 먼저 입력된 신호에서 잡음을 제거한 후 음성 신호만 추출한다. 그런 다음 음성 신호를 하나의 음소로 판단되는 구간인 '음소 추정 구간'들의 배열로 바꾸어 준다. 그런데 음성 신호를 음소 단위로 정확히 나누는 것은 쉽지 않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음성 신호를 일정한 시간 간격의 '단위 구간'으로 나누고, 이 단위 구간 하나만으로 또는 연속된 단위 구간을 이어 붙여 음소 추정 구간들을 만든다.

음성의 비교는 음소 단위로 이루어지는데 음소 추정 구간에 해당하는 음소를 알아내기 위해서 각 구간에서 '특징 벡터'를 추출한다. 각 음소 추정 구간에서 추출하는 특징 벡터는 1개이다. 특징 벡터는 음소를 구별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수치로 나타낸 것으로, 음소 추정 구간의 길이에 상관없이 1개로만 추출된다. 특징 벡터는 음소의 특성을 잘 나타내는 정보들을 이용하지만 사람마다 다른 특성을 보이는 정보는 사용하지 않는다. 사용하는 정보의 가짓수가 많을수록 음소를 더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지만 그만큼 필요한 연산량이 많아져 처리 시간은 길어진다.

음성을 인식하려면 ㉠ 입력 패턴의 특징 벡터와 기준 패턴의 특징 벡터를 비교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음소 추정 구간이 비교하려는 기준 패턴의 음소 개수와 동일한 개수가 되도록 단위 구간을 조합한다. 그리고 각 음소 추정 구간에서 추출된 특징 벡터를 구간 순서대로 배열하여 입력 패턴을 생성한다.

예를 들어 ㉡ 입력된 음성 신호를  $S_1, S_2, S_3$  3개의 단위 구간으로 나눈 경우를 생각해 보자. 만일 비교하려는 기준 패턴의 음소가 3개라면 3개의 음소 추정 구간으로부터 입력 패턴이 구성되어야 하므로  $[S_1, S_2, S_3]$ 의 음소 추정 구간 배열을 설정하고, 이로부터 입력 패턴을 생성한다. 그런 다음 이것을 순서대로 기준 패턴의 음소와 일대일 대응시키고 각각의 특징 벡터의 차이를 구한 뒤 이것들을 모두 합하여 '패턴 거리'를 구한다. 만일 기준 패턴의 음소가 2개라면 3개의 단위 구간을 조합하여  $[S_1, S_2 \sim S_3], [S_1 \sim S_2, S_3]$ 로 2개의 음소 추정 구간 배열을 설정하고, 이로부터 입력 패턴을 생성한다. 이와 같이 1개의 기준 패턴에 대해 여러 개의 입력 패턴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경우에는 ㉢ 생성 가능한 입력 패턴과 기준 패턴 사이의 패턴 거리를 모두 구하고, 그중의 최솟값을 그 기준 패턴에 대한 패턴 거리로 정한다. 만일 기준 패턴의 음소가 3개보다 크면 두 패턴을 일대일로 대응시킬 수 없으므로 비교가 불가능하다.

단위 구간의 시간 간격을 짧게 하여 그 개수를 늘리면 음소 추정 구간을 잘못 설정하여 발생하는 오류를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연산량이 많아져 처리 시간은 길어진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에 저장된 모든 기준 패턴에 대해 패턴 거리를 구하고 그중 최솟값이 되는 기준 패턴을 선정

한다. 최종적으로, 이 기준 패턴에 해당하는 문자열을 입력된 음성 신호에 대해 인식된 단어로 출력한다.

주목해야 할 점 : 1~5문단 이해하기

## 내용 정리하기

[44~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2011. 수능 [44~46]

주목해야 할 점 : 1~2문단 이해하기 + 45번 선지 완벽하게 풀이하기

### 내용 정리하기

채권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유가 증권으로, 국채나 회사채 등 발행 주체에 따라 그 종류가 다양하다. 채권의 액면 금액, 액면 이자율, 만기일 등의 지급 조건은 채권 발행 시 정해지며, 채권 소유자는 매입 후에 정기적으로 이자액을 받고, 만기일에는 마지막 이자액과 액면 금액을 지급받는다. 이때 이자액은 액면 이자율을 액면 금액에 곱한 것으로 대개 연 단위로 지급된다. 채권은 만기일 전에 거래되기도 하는데, 이때 채권 가격은 현재 가치, 만기, 지급 불능 위험 등 여러 요인에 따라 결정된다.

채권 투자자는 정기적으로 받게 될 이자액과 액면 금액을 각각 현재 시점에서 평가한 값들의 합계인 채권의 현재 가치에서 채권의 매입 가격을 뺀 순이익의 크기를 따진다. 채권 보유로 미래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여 평가할 때는 금리를 반영한다. 가령 금리가 연 10%이고, 내년에 지급받게 될 금액이 110원이라면, 110원의 현재 가치는 100원이다. 즉 금리는 현재 가치에 반대 방향으로 영향을 준다. 따라서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의 현재 가치가 하락하게 되고 이에 따라 채권의 가격도 하락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처럼 수시로 변동되는 시중 금리는 현재 가치의 평가 구조상 채권 가격의 변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된다.

채권의 매입 시점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인 만기도 채권의 가격에 영향을 준다. 일반적으로 다른 지급 조건이 동일하다면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가격은 금리 변화에 더 민감하므로 가격 변동의 위험이 크다. 채권은 발행된 이후에는 만기가 점점 짧아지므로 ㉠ 만기일이 다가올수록 채권 가격은 금리 변화에 덜 민감해진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높은 순이익을 기대하므로 액면 이자율이 더 높은 채권을 선호한다.

또 액면 금액과 이자액을 약정된 일자에 지급할 수 없는 지급 불능 위험도 채권 가격에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채권을 발행한 기업의 경영 환경이 악화될 경우, 그 기업은 지급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채권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게 되고, 이에 따라 채권 가격은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된다.

한편 채권은 서로 대체가 가능한 금융 자산의 하나이기 때문에, 다른 자산 시장의 상황에 따라 가격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 가령 주식 시장이 호황이어서 ㉡ 주식 투자를 통한 수익이 커지면 상대적으로 채권에 대한 수요가 줄어 채권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다.

45. 밑줄로 미루어 알 수 있는 것은?

- ① 채권이 발행될 때 정해지는 액면 금액은 채권의 현재 가치에서 이자액을 뺀 것이다.
- ② 채권의 순이익은 정기적으로 지급될 이자액을 합산하여 현재 가치로 환산한 값이다.
- ③ 다른 지급 조건이 같다면 채권의 액면 이자율이 높을수록 채권 가격은 하락한다.
- ④ 지급 불능 위험이 커진 채권을 매입하려는 투자자는 높은 순이익을 기대한다.
- ⑤ 일반적으로 지급 불능 위험이 낮으면 상대적으로 액면 이자율이 높다.